

# '패트 접점 찾기' 이번주가 분수령

선거법 본회의 부의 D-2  
민주, 4+1 테이블 마련 준비  
한국당 '법안 철회' 입장 불변  
막판 협상 결과 관심



“선거제 개혁안 처리하리” 지난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대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에 접어들게 되면서 여야의 진격 승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패스트트랙 협상을 활성화하며 접점 찾기를 나설 것으로 보이며 급주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4+1' 가능할까=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은 물밑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만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정당 진형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도저히 한국당과 협의가 안 된다면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했던 분들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농성에 나선 만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합의점 찾을 수 있나=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 상 합의점을 찾는 것도 거의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새 선거법에 담긴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공수처법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미뤄놓고 공수처 법안만 우선 합의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시기=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달 17일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법

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 문 의장이 생각이다.

다만 상정된다고 해도 표결이 쉽게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등을 삼가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시기는 다음 달 17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협상 결과에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

## 다음달 중순 중폭 개각 가능성

차기 총리 후보 김진표·진영...법무장관 추미애·전해철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중순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복수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 장관들의 공직사퇴시한 및 청문 일정 등을 역산하면 이른바 12월 10일을 전후해 개각 명단이 발표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기 총리 후보로 복수의 인사에 대해 기초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유력 후보로는 김진표 의원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꼽히고 있다. 양측 모두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김 의원에

무게가 더 실리는 형국이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당내 최고의 '경제통'으로 꼽힌다. 진 장관이 발탁될 경우 여야를 아우르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협치형 총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5선의 원혜영 의원도 여전히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의 요청이나 본인 동의를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체설에 선을 그었다.

장관들의 교체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 공적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이후 '원포인트'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추미애, 전해철 의원의 발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으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승진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 그룹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한 뒤, 동의하는 장·차관의 명단을 추려 청와대에 내달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한 대표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흥남기(강원 춘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차출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출마예상자 명단에 꾸준히 오르내린다.

교체 인사들이 추려진 뒤에는 후임 각 자리에 대한 인선과 검증 등 절차를 거쳐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각 명단 발표 시기는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사퇴시한(내년 1월 16일)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하며, 만일 이때까지 후임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장관이 사퇴를 강행한다면 장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후임자 발표에서 실제 임명까지 보통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2월 중순에는 개각 명단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라는 절차까지 필요해 이른바 내달 10일을 전후해 개각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 총선 앞 신생정당 난립

중앙선관위 34개 등록...선거법 개정안 노림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가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및 정당 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4·15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지난 21일 기준 등록 정당 수는 총 34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원내 의석을 확보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정당뿐 아니라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가진 정당도 다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정당으로 등록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다. 이밖에 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등도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지난 2015년 11월 19일 기준 등록 정당 수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등 총 19개였다는 점에서 4년 동안 15개 늘어난 셈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중앙선관위에 정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은 11곳이었다.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기본소득당, 핵나라당, 비례한국당, 국민의힘, 소상공인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등록 정당 수가 많아지고, 다수의 정치 세력들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 내년 총선을 통한 국회 진입이라는 '특수'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군소 정당들은 국회에 입성할 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변혁, 내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

이번주까지 시·도당 8곳에 창당기획단 구성

바른미래당 비당권과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12월 8일 열겠다고 24일 밝혔다.

변혁 신당추진기획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신당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이달 26일 변혁 의원 회의를 통해 중앙당 발기인 대회 안건을 추진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중앙당 발기인 대회는 창당을 위한 법적 조직인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라며 "중앙당 기획단은 창당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말까지 수도권 등 시·도당 8곳에도 창당기획

단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내를 목표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당추진기획단은 '변혁 신당에 바라는 7가지 요구'라는 제목의 신당선언문도 이날 발표했다.

신당선언문은 신당이 ▲상식에 기반한 정당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정당 ▲말을 하고 한 말은 지키는 책임 정당 ▲안보 위협·재해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당 ▲노동과 일자리를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로 풀어내는 정당 ▲시민과 교류하는 생활 현장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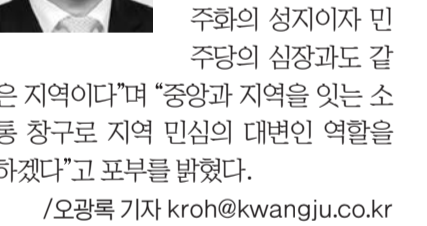
## 민주 광주 북구 갑 지역위원장 직대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조오섭(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 전 광주시의원을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갑 출마가 점쳐졌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사실상 출마를 접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특보는 내년 총선에서 북구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6·7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조 특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으로 활

동했다. 조 위원장은 "광주 북구갑은 옛 광주교도소와 광주역 등 5·18 사적지가 있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은 지역이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소통 창구로 지역 민심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 건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육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동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감정가 13억1천2백만원 최저가 (70%) 9억1천8백5십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 아 파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셀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용봉동 쌍용에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2차 56평형 감정가 5억3천만원 최저가 3억7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